

기고

국중균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코로나19자가 격리를 겪고 나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 일원에서 광범위하게 전염되고 다양화되면서 청정 광주, 전남이 코로나 방역에 개인 각자가 모두가 기본 수칙을 준수했는지 의심스럽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격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누적 확진자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요즘 밖에 외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수칙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거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깨어있고 전 세계적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힘이 솟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상점이나 음식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 역시 코로나19에 대해 남의 일로 생각하고 생활해왔는데 가족 중에 코로나 의심자 접촉으로 인하여 선제적 대응체제로 보

건소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검사와 자가 격리 통보받고 2주간 집에서 가족 간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보건소에서는 자가 격리대상자에 대한 확인 전화와 특히 가족 간의 철저한 격리된 생활만이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가족 모두가 격리된 생활과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주거하는 곳에 하루 몇 차례 자체 방역하면서 자가 격리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양성 확진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근심으로 속이 타들어가 듯이 조바심이 생기고 종일 마음속에 헛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고 또한 우리 가족 접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일어나지 않는 앞날에 대해 걱정해 연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격리해제 전일 음성으로 통보 받고 격리 해제되던 날 평범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글귀처럼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행복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적신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 말고 각자 개인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안전 안내 문자에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社 說

바람직한 국회법 개정 방향

국회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입법 기간을 단축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 최장 330일로 규정된 국회법 85조를 고쳐 75일로 줄이자는 게 요지다. 주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견해차로 타협이 막혀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인데 개정 요지가 단축 쪽인 것만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은 18대 국회 때 개정 국회법에 처음 규정됐다. 2012년 5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표결 처리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안 심사 지연을 벌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숙려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뒤 문제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20대에선 동물국회조차 막아내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21대 국회는 20대를 반성하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그래서 21대 입법이 시작된 지 2개월여밖에 안 되었는데도 국회법 개정안만 벌써 50여건이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견해차로 타협이 막혀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인데 개정 요지가 단축 쪽인 것만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은 18대 국회 때 개정 국회법에 처음 규정됐다. 2012년 5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표결 처리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안 심사 지연을 벌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숙려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뒤 문제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20대에선 동물국회조차 막아내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통합당 전신인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코로나 19 감염예방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왔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실내뿐만 아니라, 계곡, 야영장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을 통해 감염되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더 이상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다.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말을 통한 전파이므로 마스크 착용은 차단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하며, 상호간에 미착용 시 감염률이 약 1.5%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밀폐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마트나 극장과 같이 여

름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에 따른 집단감염의 우려도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실내외 공간을 최소화 해야하며, 가급적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준수하자.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무심코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런 경우 직접 접촉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로 감염 예방을 해야한다.

급년 여름은 어느해보다 간헐적인 장마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의 소홀로 인해 집단감염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개인위생수칙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이 되도록 우리함께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현욱/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최근 일주일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 30여명, 실종자 12명, 부상자 8명 등 많은 인명피해와, 도로와 교량피해,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도로에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로 인해 주행중인 차량이나 인근 주택을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간헐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따라서,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 예보 시에는 방송 등을 통해 호우 및 태풍 등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재난정보를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며,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는 많은 비와 강풍이 불기 때문에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지붕, 창문, 출입문 등은 단단히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아울러, 축대, 공사장, 용벽 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차량운행이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끝으로,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 두어서 물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천 근처나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김창수/여수소방서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광2)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